

통합교육감 선거전 본격화...현직 출격에 판세 요동

현직 이정선 내일·김대중 4월 중 예비후보 등록 사회단체 추천후보 단일화 착수...합중연희 관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감 선거전이 현직의 가세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현직 교육감들의 잇따른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시민사회 진영의 단일화와 추가 출마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선거 구도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전의 분수령은 현직 교육감들의 행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6일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이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도 4월 중순께 예비후보 등록을 검토 중이다. 두 인물 모두 그간 공청회를 통해 교육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론을 다져온 만큼, 공식 출마 선언 이후에는 본격적인 세대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등록 이후 행보에서도 차별화가 예상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순천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전남지역 공략에 무게를 두는 한편, 순천과 목포에서 교육비전 선포식을 열며



이정선



김대중



김해룡



강숙영



장관호



정성홍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김대중 교육감은 '555인 교육비전 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정책 기반을 다지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사무소 역시 광주를 중심으로 하되 전남 각 권역에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의 정성홍 후보와 전남의 장관호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착수하며 연대 가능성이 타진하고 있지만, 과거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이 커 실제 성사 가능성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각자 완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독자 노선을 택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강숙영 후보는 처음부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지지층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김해룡 후보 역시 전남 동부권을 중심

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오경미, 문승태 등 추가 출마 예정 인사들의 연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선거 구도는 더욱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이 제한적이지만, 본격적인 현직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후보 간 합중연희를 거치며 분위기가 빠르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는 다른 정치 이슈에 가려져 있지만, 현직 교육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거 열기가 단기간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후보별 정책과 경쟁력이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올해 첫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치르는 학생들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올해 3월 학력평가는 서울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1948개 고등학교의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적표는 다음 달 9일부터 출력 가능한다. 고1~3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원점수와 등급만 기재하고, 그 밖의 영역은 9등급 상대평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게 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윤호중 행안부 장관, 오늘 광주·전남 행 빛그린산단·로컬푸드 매장 등 산업 현장 확인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합동 워크숍 개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광주와 전남 장성·함평·영광을 잇따라 방문해 산업 현장과 지역 돌봄 체계를 점검한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현장 점검 일정이 마련되면서 행정 연계와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오는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윤영 실태를 확인한다. 공장 부지 활용과 기업 활동 여건,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어 영광군 청에서는 통합돌봄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돌봄 정책 추진 상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현장 관계자들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제도 보완 필요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을 찾아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현황과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일정에 전남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합동 워크숍도 포함됐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체계 통합과 정책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장성으로 이동해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방문, 시설 운영과 유통 구조를 살펴보고 지역 농가와 연계 상황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운영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합행에서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입주 기업

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앞두고 준비 절차 속도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까지 18개 핵심과제 실행계획 착수 자치법규 2600건 전수조사·특별법 위임 조례 149건 정비 병행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시스템 정비 등 통합 준비 전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실무준비단을 확대 개편한 데 이어 자치법규 정비, 전산 통합, 예산 확보 작업까지 병행하며 실질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1차 2과 5팀 체계로 조직을 확대했다. 실무준비단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실무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

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 광주·청원 등 거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계개선 지원단과 협의회 18개 핵심과제를 담은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기초자료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 과제는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시스템 정비에 맞춰져 있다. 조직·재정 분야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현황을 비교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부시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짤 예

정이다. 법제 정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자치법규 약 2천600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할 법규와 한시 유지 법규, 일원화 대상 법규로 나눈 뒤 단계적으로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출범과 동시에 시행해야 할 법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과 공포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에 대한 제·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대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전산 시스템 정비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을 비롯해 내부 행정결재 시스템, 사·도·간 통신망, 관광 플랫폼,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과 통합을 추진해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확보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전남

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의 정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에 나섰다. 지난 20일에는 강원도 전남도 경제부처사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지금까지는 기초자료 조사와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통합안을 만들고, 출범 이후에도 대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오는 25일 행안부, 광주시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을 열고, 26일에는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 회고회, 27일에는 행정통합 학술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하며 후속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에너지 위기 선제 대응 나서 대시민 캠페인 전개... 사회 보호계층은 탄력적 예외 적용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사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발맞춰 고강도 '에너지 절약 조치'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합리적 에너지 절감과 자체 효율 집중 관리, 승용차 운행 효율화, 참여 문화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설정해 현장에 즉각 적용키로 했다. 먼저 건물 내 실내 적정온도를 냉방 26℃로 엄격히 제한하고 개인 냉방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복도 조명은 50%를 소등하며, 중식 시간과 미사용 공간의 전력을 차단해 불필요한 낭비 요인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공사 내 차량 5부제 역시 철저히 점검해 승용차 운행 효율화를 도모한다. 단, 무조건적인 감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산부나 장애인 등 사회 보호계층이 이용하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온도 제한 예외 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외부 활동도 병행한다. 공사내 승강기 내 홍보 영상 송출과 홈페이지 참여형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위기 극복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



갈 계획이다. 김승남 사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정부 지침에 발맞춘 신속한 수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수급 불확실성 지속에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을 보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공급 불안 우려가 포착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 18일 이를 '주의' 단계로 한 차례 더 격상하며 국가적 대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낮 시간대 충전 등 12가지 국민 행동을 제시하며 전 국가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도시철도 요금 인상 추진...10년 만 카드 250원·현금 300원 인상안 시의회에 제출

광주시가 시내버스요금에 이어 10년간 동결된 도시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24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6년 광주도시철도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따르면 성인 기준 교통카드 요금은 현행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현금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21.4%)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소년 교통카드 요금(900원)과 어린이 현금·교통카드 요금(5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 현금 요금만 300원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6월 1일 요금 조정을 목표

로, 5월 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 도시철도 요금은 다른 광역시보다 낮은 수준으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됐다. 2024년 기준 도시철도 총 운송원가는 1209억원이지만, 운송 수입은 119억원에 그쳐 원가 대비 9.9%에 불과하다. 부족분에 대한 시 재정 보전액은 701억원에 달했다. 경로·장애인 등 무임 승객에 따른 손실도 2024년 기준 79억원으로, 적자 확

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요금 인상안을 적용하면 운송 수입은 142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원가 대비 11.7% 수준에 머문다. 운송 적자도 1090억원에서 1067억원으로 일부 감소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교통카드 250원, 현금 300원, 좌석버스 4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 의견청취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